

특집

해외건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 리비아 사태 장기화되면... 진출 업체 피해 증폭 우려

- 철수에만 수백억원 소요, 주택 건설 현장 대금 회수 어려움 예상 -

이 군 호 | 머니투데이 기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이 인근 국가로 급속히 번지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 Middle East North Africa)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급속히 번질 것만 같던 MENA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40년 간 철권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카다피의 나라, 리비아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로 시작된 리비아 사태는 부족간 권력 다툼으로 번지더니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내전으로 치달았다.

기세가 오른 반정부군에 밀려 트리폴리마저 위태로워지자 카다피는 대규모 공습으로 반정부군의 기세를 꺾으며 벵가지 함락을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리비아 정부군이 반정부군 세력의 중심지인 벵가지를 손에 넣을 경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우려되자 결국 연합군은 리비아 정부군을 폭격하며 전세를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리비아 사태가 숨 가쁘게 진행되자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은 사태 추이를 불안한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미 79명의 필수 인력만 남겨 놓고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이지만 사태 변화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리비아 사태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다양하다. 우선 한국 건설 근로자와 제3국인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건설사는 현장을 버리고 철수한 상황이라 대규모 미수금 발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리비아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력 시장 중 하나인 리비아에서의 발주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민주화 바람이 MENA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60%를 넘는 MENA 발주 물량이 급감하는 데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철수에 수백억원대 들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리비아를 철수하면서 우리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3국 근로자들도 동시에 철수시켰다. 리비아 사태가 정상화될 경우 현장 경험이 많은 3국 근로자들이 복귀해야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3국 근로자들을 일시에 철수시키기 위해 그리스에서 선박을 임대해 철수시키고 제3국 근로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권도 마련해 줬다. 대우건설의 경우 항공료와 선박 운임과 임대료 등을 합쳐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수십 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만만치 않은 철수 비용이 들었지만 대우건설은 이 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철수 비용을 고스란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 건설 현장 미수금 늘어날 듯

리비아 사태로 건설사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는 미수금이다. 현재 필수 인력이 남아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현장을 버리고 철수한 주택건설사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가 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53건 107억 달러 규모로 이 중 주택 관련 사업은 15건 50억 달러 내외다.

해당 국가 정정이 불안해질 경우 주택사업은 대금 지급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발전소, 플랜트 등의 기간시설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보니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에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리비아와 같이 정정이 불안한 국가에서 주택사업을 수주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중견 건설사 대부분이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사태 종료 이후 발주처가 ‘공사 중도 포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해도 대항할 수단이 없다.

발전소 등의 기간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들은 철저하게 선수금과 기성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데다 일부 공사는 완공해 시운전만 남겨 놓은 곳도 있어 아직까지는 미수금에선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79명의 직원이 남아 현장을 보존하고 있어 향후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연합군 공습이 장기화되면서 완전 철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발주처와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협의를 끝냈다.

다만,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가 기업간 상업거래 제한으로 확산될 경우 예상치 못한 미수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해외 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방의 제재가 카다피와 가족들에 대한 금융 자산 동결 등에 그쳐 실제 우리 기업들이 금융 제재로 인한 미수금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는 아니다”며, “금융 제재가 국영 기관으로 확대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MENA 발주 축소 우려

건설사들이 리비아 사태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대규모 발주 지연과 이에 따른 수주 감소다. 이미 리

## 특집 해외건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비아에서는 당초 수주 목표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리비아는 사우디와 UAE에 이어 3번째 해외건설 시장으로 국내 건설 관련 기업들의 누계 수주액이 지금까지 366억 달러에 달한다.

리비아에서의 연도별 수주액을 보면 △2007년 54억 달러, △2008년 15억 달러, △2009년 31억 달러, △2010년 19억 달러 등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략 수주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리비아에서 발전소 프로젝트만 3건을 수주한다는 목표였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력 시장인 리비아에서 올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에서는 정권과 유력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투자 개발형 사업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주체가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돼 MENA 전역에 민주화 바람이 거세질 경우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당초 목표 700억 달러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예멘, 바레인 등 일부 중동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7.3%, 2008년 57.1%, 2009년 72.7%, 2010년 66.0%, 2011년(1~3월) 67.1% 등 매년 절반을 훌쩍 웃돌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최대 건설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정상적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어 MENA 건설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은 기우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 삼성엔지니어링은 2월 21일(현지 시각) 사우

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로부터 2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샤이바(Shaybah) NGL(Natural Gas Liquid)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계획된 대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건설사들은 사태 추이 변화를 전망하기가 어려운 만큼 올해만큼은 수주 지역을 다변화하고 신수종 사업 진출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알제리 알제, 콜롬비아 보고타에 지사를 냈고 올해는 베이징 지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나이지리아 등 주력 시장에서의 수주를 확대하고 베트남 하노이 인근 신도시 개발 사업을 단독 추진하면서 수주 물량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중동 민주화 바람이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요 사태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SOC와 플랜트 발주를 늘리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경우 실업률이 20~30%대 수준이어서 당장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설경기 부양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일부 부유층에 몰려 있는 국부가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리비아 사태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오일 머니를 더 쌓게 되는 중동 산유국들이 공사 발주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중장기 호재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유가 수준을 85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지만 리비아 사태 이후 100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CERIK